

위안부 문제 토론회…12·28 합의 비판론속 다양한 대안도

기사입력 2016/09/01 16:49 송고



[연합뉴스TV 제공]

김창록 교수 "'12·28 합의' 파기해야"...남기정 교수 "제3의 길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원을 송금한 다음날인 1일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문제 현 단계를 진단한다'는 제목의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28 합의를 파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2·28 합의는 위안부 문제를 봉인할 뿐더러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시킨다"며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의도에 따라 합의를 관철하는 통로에 머물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2·28 합의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피해자, 시민들이 책임을 추궁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의 '부작위'를 영속화한 한국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들과 시민이 외쳐온 것은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배상 등"이라며 "'정의로운 해결'을 외쳐온 이들에게 시간을 내세우며 포기하라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힘을 모아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12·28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앞으로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합의를 강행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와 피해자, 지원단체 간 신뢰가 생기면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10억엔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정부는 합의 실행을 일시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원단체는 일본 총리의 직접 사죄, 소녀상 언급 중단 등 전제 하에 조건부 합의존중의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이 낸 10억원의 자금을 지급할 때 총리 명의의 반성문, 사죄편지가 전달돼야 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1 16:49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